

# 여야 4당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불발

## 정 의장, 황 대행에게 전화해 '특검 연장' 입장 표명 요구키로... 문재인 "국민들 마음에 대한 배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특검연장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특검법 직권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된 것은 없다"며 "각 당 입장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전례를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의사표시를 했다"며 "황 대행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도 안하고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행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지만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특검 연장을 해야 한다"며 "정 의장이 황 대행에게 전화라도 걸어 국회 입장을 전하고 입장을 미리 전해달라고 했다. 정 의장이 전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준비기간 20일, 1차 조사 기간 70일, 2차 조사 기간 30일로 합의했던 것인데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차 연장을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합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정신에 맞게 연장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특검이 더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월 국회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포함



'특검 연장'과 '연장 불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은권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회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28일로 시한이 다가온 특검 연장을 위해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타개책 모색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연장이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를 명시하고 그 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단일 황 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 모두 국민들의 일치된 한 마음에 대한 배신"이라며 황 대행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영천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저는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물론 직권상정할 사안인지,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달린 일"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직권상정 해서라도 특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거듭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울러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스팔트의 피' 등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탄핵심판결정 불복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잘못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잘못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담백하게, 담담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뉴스시스

## 도의회 부의장에 정호영 의원 선출

도의회 강영수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도의회 제2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정호영 의원은 23일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치러진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 33표 중 17표를 얻어 14표를 획득한 국민의당 이성일 의원을 따돌렸다.



신임 정호영 부의장은 "도민과 함께 도정을 바로 잡고 동료 의원의 정책 발목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라고와 전북대를 나온 정 부의장은 초선으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인재용 기자

## 운주현 김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입당

운주현 김제시의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운 의원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저와 김제시민의 지역발전이라는 갈증에 응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입당하게 됐다"며 입당 이유를 밝혔다.

운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당을 탈당한 이후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고견을 들었다"면서 "많은 주민들은 김제의 자존심을 지키고 김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당 한 국회의원이 '김제 소멸론'과 함께 소위 혁신이니 변화니 하면서 그 소중한 전통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엎으려 나서는 모습과 대비된다"며 "저는 작지만 의미 깊은 오늘의 북망으로 김제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에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새 정치인이라는 질책을 감당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정치적 행보를 나선다"면서 "진정한 김제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비리검사' 꼼수 퇴직 방지법' 등 31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리 검사가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하는 것을 막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위가 있는 검사가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의 징계 불이익 회피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률안은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의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 해임·면직·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자체 없이 징계를 청구하게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 퇴직 후 1년이 안 된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미만의 인물을 검사 임용에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검사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적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뉴스시스

## "새만금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지정해야"

새만금 사업을 기재부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사업은 올해 전북지역 공공기관 SOC 사업 중 34%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새만금 사업은 외지업체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이 진정한 전북발전 기회가 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재

부장관 및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랫동안 전북과 지역건설업계의 지역업체 참여 보장 요구에 대해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관련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가계약법 위배 않고 현 규정을 활용해 새만금에 별도의 턴키평가 기준을 만드는 등의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 수 있다"

## 최인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기업 우대기준 만들라'

며 "도 및 관련부서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턴키발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신항만 사업, 남북 2축 공사의 1단계와 2단계 사업 등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1군 업체의 독점과 지역업체 배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